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불편한 일상

지난 22일 주문한 침대 배송 안돼
인터넷 카페션 '로드 탁송 불만'
광주 수소충전소 '50% 제한'도
휘발유·경유 매진될까 뉴스 주시
광주·전남 9개 사에 업무개시명령
시민단체들 "명령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동총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7개 노동·시민단체들이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노동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민모씨(26)씨는 지난 22일 온라인에서 침대를 구입했지만, 배송이 기한없이 미뤄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는 배송예정일인 28일 민씨에게 전화해 "물건은 준비가 됐지만, 화물 기사가 없어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 배송 업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로드 탁송이 이어져 불안하다'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왔다.

광주 공장에서 완성차를 이송하는 '카 캐리어' 108대가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수백명이 신차를 출고센터로 로드탁송(개별도로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로드탁송을 거부하면 손님이 밀려 인제 차를 다시 받을 지 알 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은 '거리만 멀지 않다면 직접 탁송을 하고 싶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 차가 아니라 급가속·급제동을 하지는 않음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내 수소충전소에도 '50% 수소 제한 충전'을 내건 총천소가 나타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번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소 충전을 선제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의 수소충전소 사장은 "타 지역 수소충전소는 벌써부터 제한 충전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광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수소충전소를 관리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 관계자도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면서 하루에 5~6대씩 들어오던 수소 차량이 한동안 4대 수준으로 줄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언제 수급이 중단될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오후 4시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30일 품질 주유소는 전국 26개소로 서울 13개소, 경기 6개소, 인천 4개소, 충남 3개소다. 아직 광주지역은 없지만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화

물연대 파업으로 기름이 동날까 걱정하고 있었다.

광주 상무지구 주유소에서 만난 선모씨(여·45)는 "출장을 많이 다녀 주유를 자주하는 편인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언제 휘발유가 품절될지 몰라 매일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막카페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바닥난다는 소문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왔다. 1010km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회원들은 댓글에서 아직 기름을 채우지 않은 회원들에게 "기름이 매진되기 전에 얼른 다녀오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민주노동총광주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장사가 안돼 그만둔 사람에게 강제로 장사하라고 하는 꼴"이라며 "파업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련자들 2년 만에 기소

공무원 등 8명...시공·감리업체도

주인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군 오산면 산사태 사고 책임 관련자들이 사고 발생 2년 3개월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다고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검찰이 산사태사고를 감정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잘못 요청한데다 담당검사의 인사로 인해 기소가 늦어진 것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전남도 소속 공무원 2명과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이 붕괴하는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로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로가 유실돼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산사태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소속 공무원과 감리자들은 보강토 옹벽 1차 준공검사시 구조계산서·안전 검토의견서 등이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6

일 뒤 관련서류를 채워 넣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로 아래 2곳의 옹벽이 2분 사이에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발생 후 보강을 위해 2004년 계산식 옹벽을 조성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 옹벽에 대한 균열·토사 유실에 대한 관리를 한번도 하지 않고 2010년 전남도로 관리주체가 넘어갈 때도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도로 아래 다른 옹벽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에 맡은 설계사는 이전 계산식 옹벽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시공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기존 설계된 'L형 무근 콘크리트 옹벽' 방식을 '보강토 옹벽'으로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측은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감리는 커녕 설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상충한 점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다목적 기동대 운영 치안공백 줄인다

광주경찰은 최근 파출소 인력을 재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목적 기동대'를 운영해 지역 치안 공백을 없애겠다고 30일 밝혔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안 정책 성과와 방향을 설명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21일 지역경찰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지구대·파출소 근무 인력을 재조정했다. 치안 수요가 많은 첨단·수안·상무지구대 등의 야간시간 인력을 증원하고 수요가 적은 풍암·염주·양림파출소 등은 주간 파출소로 전환했다.

이 여파로 인력이 축소되거나 지구대·파출소가 폐쇄된 지역에서는 다목적 기동대를 배치해 현장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들의 수사

과 기피 현상의 대안으로 동·남부서 통합형사팀 운영 등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중 대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 혐의로 입건된 4명을 수사 중이며, 올해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의 채용비리, 논문대필 등 수사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피고소인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서·북구 39건 적발 과징금

민주노동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진행되면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적발이 늘고 있다.

대형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이면도로, 도심 복판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돼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화물차 등 밤샘주차(새벽 0

시~4시) 단속을 실시해 총 39건을 적발, 과징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는 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카캐리어 차량 등 총 16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해 화물차에 계고장을 붙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북구는 앞서 25일 광주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오통동 삼삼 광주전차 제3공장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해 23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이중 4건에 과징금을 매겨 총 50만원을 부과했다.

주차된 화물차 중 서울, 경기, 전남도 등 타 지역에 등록지를 둔 차량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징금

처분 협조를 요청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개인 사업용 차량은 10만원, 법인 소속 차량은 20만원이다.

계도 처분도 이어졌다. 북구는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인근에서 밤샘주차 차량 7건을 적발해 계도 처분했다.

광산구는 화물연대 측과 마찰 등을 이유로 단속 및 과징금 처분없이 계도만 하고 있는데, 24일 이후 소총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일 평균 40여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해 계도장을 부착했다.

동구와 남구에서는 파업 영향이 적어 일상적인 단속만 이어졌다. 24일 이후 상습 밤샘주차 구역 단속을 통해 동구는 15건, 남구는 9건을 적발해 계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법 "헬기 진압 저항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손배소송 노동자 손 들어줘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우 대법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면서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다더라, 이는 위법한 공무원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고 헬기 등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의 손을 들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small>기초반, 중급반</small>
<p>▶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p> <p>■ 임야 : 7,500평</p> <p>■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p> <p>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중주거지역)</p> <p>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p> <p>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p> <p>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p>		
<h3>010-6670-9800</h3>		<h3>010-2614-9801</h3>